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의 소비여력 분석 및 대안

정상희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계소비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가계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 되어야 함.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별·종사상지위별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평균 가구소득은 440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 전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700만원 가량 증가, 임시일용직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가 817만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함.

같은 기간 가계지출은 92만원 가량 증가하였지만 87만원이 비소비지출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계층의 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계층은 감소함.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의 소비지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소비성향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 부담이나 가계부채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DSR(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졌으며,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 1) 실질임금 인상 2)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비소비지출 비중 감소 3) 가계대출 억제와 임차주거 생활자 보호 방안을 제시함.

I. 검토배경

□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계소비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가계소비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함

- 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 비중은 2011년 62.5%, 2012년 64.5% 그리고 2013년 64.7%로 지속적으로 증가
- 가계지출은 소비성 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로 구성되며 소득에서 비소비성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야 함
- 다음으로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가계소비 증대가 이루어져야 함

○ 가계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통계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함

II. 가구 경제상황 분석

□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득 5분위별 가구 평균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소득분위간 격차는 더욱 심화

- 2011~2013년 평균 가구소득은 440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1분위 소득은 67만원 증가한데 반하여 5분위 소득은 760만원이 증가함
 -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는 2011년 9,300만원에서 2013년 1억원으로 700만원 가량 증가하여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최저생계비 대비 1분위 가구소득은 2013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1,690,772원)의 70.5%, 3인 가구 최저생계비(15,123,780)의 54.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고 있음¹⁾
- 같은 기간 종사상지위에 따른 평균 가구소득은 상용근로자 467만원, 임시·일용직 436만원 그리고 자영업자 564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소득격차도 심화됨
 - 상용근로자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11년 8,526만원에서 2013년 9,186만원으로 66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은 817만원, 자영업자는 577만원 정도 증가함
 - 특히, 같은 임금근로자에 속하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는 2011년 3,133만원에서 2013년 3,264만원으로 130만원 정도 증가하여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됨

<표 1>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단위 : 만원)

		평 균						1분위5분위 격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4,233	758	1,988	3,330	5,021	10,065	9,307
2012		4,475	811	2,173	3,586	5,386	10,417	9,606
2013		4,676	825	2,299	3,793	5,637	10,825	10,000
2011	상용근로자	5,525	1,051	2,073	3,366	5,060	9,577	8,526
	임시·일용근로자	2,392	896	1,926	3,216	4,823	8,011	7,115
	자영업자	5,007	863	2,014	3,345	5,003	11,392	10,529
2012	상용근로자	5,741	1,094	2,242	3,594	5,423	9,881	8,787
	임시·일용근로자	2,568	964	2,117	3,551	5,181	8,473	7,509
	자영업자	5,317	936	2,191	3,597	5,375	11,852	10,916
2013	상용근로자	5,992	1,185	2,385	3,813	5,671	10,371	9,186
	임시·일용근로자	2,728	960	2,196	3,731	5,474	8,892	7,932
	자영업자	5,581	968	2,354	3,810	5,614	12,074	11,106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 가계지출은 2011~2013년 동안 92만원 가량 증가하였지만 소비지출 5만원, 비소비지출 87만원으로 비소비지출 증가액이 가계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소득분위에 따른 가계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1~3분위에 해당하는 중저소득 계층의 소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1~2013년 동안 1분위 소비지출은 50만원 가량 증가하였지만, 5분위는 250만원 가량 감소함
 - 특히, 1분위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기준 1분위 가구 소득은 825만원인데 반하여 지출은 901만원으로 75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함
- 종사상지위에 따른 지출 증가폭은 임시일용직이 100만원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남

1) 2013년 기준 1분위 가구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은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가구 98%, 2인가구 77%, 3인가구 69%, 4인가구 51%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비지출은 증감의 반복(상용직, 임시일용직) 또는 지속적인 감소(자영업자) 경향을 보인 반면 비소비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가계지출이 증가
- 2013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자영업자 46.7%, 상용근로자 47.0% 그리고 임시일용직 58.8%로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표 2>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단위 : 만원)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합계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합계
2011	1분위	745	78	823	2011	상용근로자	2,882	1,043	3,927
	2분위	1,457	284	1,731		임시일용직	1,553	274	1,827
	3분위	2,156	535	2,691		자영업자	2,629	944	3,573
	4분위	2,841	861	3,702		평균	2,302	757	3,059
	5분위	4,354	2,033	6,387					
2012	1분위	758	103	861	2012	상용근로자	2,805	1,109	3,914
	2분위	1,548	363	1,911		임시일용직	1,610	323	1,933
	3분위	2,195	615	2,810		자영업자	2,622	1,042	3,664
	4분위	2,849	986	3,835		평균	2,303	828	3,131
	5분위	4,181	2,081	6,262					
2013	1분위	795	106	901	2013	상용근로자	2,819	1,153	3,972
	2분위	1,593	350	1,943		임시일용직	1,604	331	1,935
	3분위	2,219	639	2,858		자영업자	2,606	1,020	3,626
	4분위	2,829	1,005	3,834		평균	2,307	844	3,151
	5분위	4,100	2,118	6,218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²⁾)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성 증가

○ DSR은 2012년 17.2%에서 2014년 21.5%로 4.3%p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년대비 DSR 격차는 2012~2013년 1.9%p, 2013~2014년 2.4%p로 증가하여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조사기간 전체에 걸친 DSR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2008년) 직전인 2007년 10월 미국의 DSR(13.2%)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줌³⁾

○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의 DSR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DSR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의 3년간 DSR은 11.5%p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2013년 1.8%p, 2013~2014년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분위 가구의 부채위험성이 갈수록 심화되었음을 보여줌
- 소득 5분위의 3년간 DSR 격차는 2.5%p 증가하였지만 전년대비 DSR 격차는 2012~2013년 1.6%p, 2013~2014년 0.9%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용직과 자영업

2) DSR(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서 실제 채무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

3) 디지털타임스, “가계부채 압박, 미 서브프라임때보다 심각”, 2014.11.17기사

자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

<표 3>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단위 : %)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원리금/처분가능소득
2012	1분위	15.7	2012	상용근로자	14.8
	2분위	16.4		임시일용직	13.6
	3분위	18.5		자영업자	23.1
	4분위	16.4		평균	17.2
	5분위	17.1			
	평균	17.2			
2013	1분위	17.5	2013	상용근로자	17.2
	2분위	21.5		임시일용직	14.9
	3분위	20.2		자영업자	26.3
	4분위	19.8		평균	19.1
	5분위	18.7			
	평균	19.1			
2014	1분위	27.2	2014	상용근로자	19.5
	2분위	24.3		임시일용직	18.4
	3분위	24.0		자영업자	26.9
	4분위	21.2		평균	21.5
	5분위	19.6			
	평균	21.5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 금융복지조사 각년도.

□ 국내 가계의 경제상황을 종합하면 소득증가 보다 부채증가가 더 크며 소비지출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계부채 위험성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를 통한 내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비지출 이후 남는 여유자금의 상당부분은 노후대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됨

- 여유자금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47%), 부동산 구입(23.4%), 부채상환(23.4%)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 투자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한 목적이 53.3%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현시점에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소비지출이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통한 내수활성화에는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부채규모도 분석기간 동안 55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여유자금의 상당한 비중이 부채상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부채문제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Ⅲ.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 실질임금 인상

○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가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임금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중하위 소득계층의 구매력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소득 1분위 계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구조로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노동생산성에 맞는 실질임금 상승 방안 마련

- 실질임금 1% 증가시 GDP는 0.68~1.09% 증가, 실질노동생산성은 0.45~0.50% 증가 그리고 고용은 0.22~0.58% 증가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임금인상 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필요

□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비소비지출 비중 감소

- 비소비지출 가운데 이자비용은 모든 소득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자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
- 한국은행의 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상태임⁵⁾
- 제2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에 맞춰 제2금융권의 금리도 낮추도록 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가계대출 억제와 임차주거 생활자 보호

-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주거마련을 위해 사용한 만큼 대출을 통한 주거 마련 방안은 억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전을 위한 안정망 마련이 필요
- 가계부채 채무 조정 및 파산신청 방안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매 등으로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주거보장제도 실시
-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
- 이번에 성남시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가 동참하여 진행한 ‘빛 탕감 프로젝트⁶⁾’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4)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부경대지역사회연구소.

5) 약관대출금리(확정금리형)가 최대 10%를 넘어선 곳은 흥국생명(10.5%), 현대라이프(10.5%), 교보생명(10.5%), 동양생명(10.25%), 라이나생명(10%), PCA생명(10%)이며 나머지도 9% 중후반대의 대출금리를 적용(중소기업신문, 2014.11.06.).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인상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브레이크뉴스, 2014.11.07.)

6) 빛 탕감 프로젝트는 시민 성금으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저가로 사들여 시민의 빛을 청산하는 범사회적 연대모금운동으로 채무자 68명의 빛 (이자포함)9억 9천만원을 탕감(경향신문, 2014.11.23.)